
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

2018. 7.

1.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현황	1
2. 금년 상반기 권고 배경 및 총론	2
3. 상반기 권고안	4
<참고> 하반기 논의 과제	17

1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현황

□ 설치 배경

-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('18.4)
 - 개혁과제 논의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 소위원회(15명)와 예산 소위원회(15명)를 설치
 - 조세재정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30명* 위원을 위촉·임명
- * 현재 2명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되어 사임함에 따라 28명으로 운영중
- 특위는 과세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·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하고,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말까지 정부에 권고

□ 상반기 주요 활동

- 조세 소위원회 (총 11회) 예산 소위원회 (총 7회) 개최
 - (조세 분야) 종합부동산세, 주택임대소득세, 금융소득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
 - (예산 분야) 재정 투명성 강화, 통합적 재정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논의
- 정책토론회 개최 (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개최, 6.22일)
 - 「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」을 주제로 학회·시민단체·언론·유관기관 등이 토론에 참여

2 금년 상반기 권고 배경 및 총론

□ 금년 상반기 권고 배경

- 조세·예산 개혁과제 중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시급한 개혁이 요구되는 과제는 우선 상반기 중에 개편안을 권고하여 금년도 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에 반영
- (목표)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·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
- (개혁 방향) ①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
②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세제도 합리화
③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

□ 상반기 권고안 총론

< 조세 개혁과제 >

- ① 계층 및 소득 종류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
-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 부동산세제를 정상화
- 금융자산 소득과 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
-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 소득세제상 특례제도를 정비

②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친화적으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

-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및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개별소비세제 개편이 필요

< 예산 개혁과제 >

①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 수립 시 활용

-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, 지방, 교육 각각 별도의 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정보를 연계(통합)

-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을 재정(총지출, 복지지출 규모 등)에 포함하여 국가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

②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세 등 국민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, 정부는 재원배분 및 지출 현황 등의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

-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재정사업 정보 제공

- 활용도가 낮거나, 단순 통계정보 전달에 그치는 재정 관련 보고서를 보완하여 재정운영 결과의 함의, 회계연도 중 재정여건 변화 등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

3 상반기 권고안 [9건]

1. 조세분야

[1] 종합부동산세제 개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종합부동산세는 '08년 제도개편 후, 주택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중부세액이 급감*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

* 제도변경 직후 납세인원(47.3%↓)보다 세액(77.0%↓)이 큰폭으로 하락

-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*가 높아지고 있으나,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**의 누진성은 미약

* Piketty(2014) 연구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, 김낙년(2016)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'13년 상위 0.1%가 전체 자산의 8.9%, 상위 1%가 25%, 상위 5%가 50%를 차지

** GDP 대비 보유세 비중(2015)은 0.8% (OECD 평균은 1.1%)
보유세 실효세율(2015)은 0.16% (OECD 13개국 평균은 0.33%)

-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

□ 권고 내용

-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연 5%p씩 단계적으로 인상
 -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.05%~0.5%p 인상하되,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
 -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.25%~1%p 인상
 -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.2%p 인상

-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, 주택·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,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됨

<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>

구 분	과세표준	세 율		
		현 행	권고안	증 감 (%p)
① 주 택	6억원 이하	0.5%	0.5%	-
	6 ~ 12억원	0.75%	0.8%	+0.05
	12~50억원	1%	1.2%	+0.2
	50~94억원	1.5%	1.8%	+0.3
	94억원 초과	2%	2.5%	+0.5
② 종합합산 토 지	15억원 이하	0.75%	1%	+0.25
	15 ~ 45억원	1.5%	2%	+0.5
	45억원 초과	2%	3%	+1.0
③ 별도합산 토 지	200억원 이하	0.5%	0.7%	+0.2
	200~400억원	0.6%	0.8%	+0.2
	400억원 초과	0.7%	0.9%	+0.2

[2]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96년 최초 시행 후 '02년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과세로 전환하였고, '13년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
 - 현재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·배당소득)이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(6~42%)로 누진과세
-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*이 심각한 반면, 가계저축률은 지속 증가**하여 저축 증대라는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

*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0% 비중('12~'16 귀속) : 이자(90.5%), 배당(94.1%)

** ('12) 3.9% → ('13) 5.6% → ('14) 7.2% → ('15) 9.3% ('15년 OECD 26개국 중 6위)

- 금융소득자 간,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
 - 기준금액 이하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중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 저해
 -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유형 간 수평적 형평성 저해

□ 권고 내용

-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
 - 소수의견으로 타 자산소득과세(임대소득 분리과세 등)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

[3]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,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*에 대해 과세 중
 - * (보증금-3억원) x 60% x 이자율('18년 귀속 1.8%) - 임대관련 이자·배당
 - 간주임대료 산정시 소형주택(기준시가 3억원 & 60㎡ 이하 주택)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('18년말 일몰)
 - 주택임대소득(월세+간주임대료)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% 세율로 분리과세* ('18년말까지 비과세)
 - * [(수입금액 - 수입금액 x 60%) - 400만원(주택임대소득외 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)] x 14%

-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상의 소형주택 특례, 기본공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
- 1~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소형주택 특례는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
-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등으로 전세보증금은 약 12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되고 있어 기본공제금액(400만원)에 대한 재검토 필요

□ 권고 내용

-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
 - 소수의견으로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(database)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됨
-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(400만원)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
 - 소수의견으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됨

[4]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 전력 발전 중 석탄발전 비중은 약 40%이고, LNG 발전 비중은 약 22%를 차지(한전 전력통계, 2016)
-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*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

* 국내발전소 및 인구현황을 고려한 IMF의 환경비용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(조세연)

<연료 유형별 환경피해비용>

(단위: 원)

		SOx (황산화물)	NOx (질소산화물)	PM2.5 (초미세먼지)	CO2 (이산화탄소)	총 환경 피해비용
발전량 기준 (원/kWh)	LNG	0.31	4.63	0.32	15.72	20.98
	유연탄	15.74	16.59	0.80	35.68	68.81
연료 사용량 기준 (원/kg)	LNG	3.3	35.9	3.4	122.9	165.4
	유연탄	40.3	42.5	2.0	91.4	176.3

- 유연탄은 '14.7월 최초 과세 후 세율을 지속 인상*하였으나,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므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 조정 필요

* ('14.7) 24원/kg → ('17.4.1~) 30원/kg → ('18.4.1~) 36원/kg

< LNG, 유연탄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('18.6월 현재기준) >

구분		LNG	유연탄
국세	개별소비세	60원/kg	36원/kg (39원/kg, 33원/kg) ¹⁾
	관세	3%	무세
	부가가치세	10%	10%
지방세	지역자원시설세	화력발전 시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	
부담금	안전관리부담금	4.8원/kg(발전용은 면제)	-
	수입부과금	24.2원/kg	-

주: 1) 순발열량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: 순발열량 5,500kcal/kg 이상 39원/kg, 5,000kcal/kg 미만 33원/kg

□ 권고 내용

-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하거나,
-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인상하되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

2. 예산분야

[1] 중앙-지방-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(교육자치단체 포함)의 재정
에 관한 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각각 제공 중

* 중앙정부 : '열린재정', 지자체 : '지방재정365', 교육자치단체 : '교육재정알리미'

-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통합적 재정정보 파악에 애로
 -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분야(복지, 일자리, 저출산 대응 등)에
지출되는 총규모에 대한 파악 곤란
 - 국민들은 국세, 지방세 등의 제세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
어떻게 쓰이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

□ 권고 내용

-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 범위
안의 재정정보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(통합)하여 공개
 - 국민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
단체(시·도 교육청)의 재정지출을 모두 나라살림으로 인식
 - 나라살림에 관한 정보는 개별 플랫폼에서의 자체적인 공개
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('열린 재정*')에서 일괄 공개

* 중앙정부 재정정보의 공개를 위한 플랫폼, www.openfiscaldata.go.kr

- 관계부처간 협의*, 플랫폼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기간을
감안하여, 재정정보의 통합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

* 재정정보 연계강화를 위한 관계부처(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교육부 등)
추진단(T/F)을 구성하여 연계방안 논의

- (1단계) '19년까지 '열린재정' 플랫폼에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통계를 일괄 공개
- (2단계) '22년까지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설명자료와 집행정보도 '열린재정'에서 통합 제공
 - 이를 위해 예산 정보의 통일된 분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업무시스템* 연계
 - * 중앙·지방 공무원들이 예·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시스템
(중앙정부: 'dBrain', 지자체: 'e호조', 교육자치단체: '에듀파인')
- 정부는 통합적 재정정보의 구축 완료 후,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분야(복지, 일자리, 저출산 대응 등)의 지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여 예산 편성, 재정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

[2]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*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
 - * 국민건강보험 + 노인장기요양보험 → 이하 '건강보험 등'
- 건강보험 등의 지출규모 전체(a)가 아니라, 정부가 건강보험 등에 지원하는 규모(b)만 국가재정('총지출' 규모)에 포함
 - * (a) : '18년 70.3조원(건강보험 63조원, 장기요양보험 7.3조원)
 - (b) : '18년 9.1조원(건강보험 8.3조원, 장기요양보험 0.8조원)
-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하지만 국가재정에서 건강보험은 제외

- 이로 인해 국민이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 인식
 - 건강보험 등을 포함할 경우 '18년 국가재정(총지출, 본예산 기준) 규모는 428.8 → 490.0조원으로 증가
 - '18년 복지지출 또한 120.8 → 182.0조원으로 증가
- 건강보험 등의 재원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됨에도 대의기관인 국회가 전체 규모를 심의·의결하지 않음
 - 국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등 지원액(총지출에 포함되는 규모)만 심의·의결

□ 권고 내용

- (1단계)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 확대
 -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 정보 공개 ('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제공)
 - 중장기 재정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*(매5년) 및 연도별 시행계획(수입·지출 포함)을 국회 보고

* 국민건강보험법(3조의2) 개정에 따라 '18.9월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예정

- (2단계) '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'* 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후 기금화**를 위한 법제화를 '22년까지 추진

* 비급여항목 급여화, 취약계층 본인부담 상한 인하,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

** (예) 국민건강보험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 설치

※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제시됨

[3] 나라살림 정보,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가 분야별, 기관별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

* 국고보조금 : ‘e나라도움’, 복지사업 : ‘복지로’, 교육지원 : ‘교육지원 한눈에’ 등

- 개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 초래

* (예) 청년 지원사업 중 ‘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’은 e나라도움, ‘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’은 복지부 홈페이지, ‘일하는 청년통장 사업’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검색

-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는 국민들이 정부에서 제공 중인 재정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움

- 검색도구가 홈페이지별로 상이하여 맞춤형 정보 획득 곤란

* ‘e나라도움’ : ‘나의 보조금 찾기’ → 나이, 성별, 지역, 주제 선택

‘교육지원 한눈에’ : ‘프로그램 검색’ → 대상(성인, 학생, 학부모), 가구상황, 소득구간, 기타(도서벽지, 특수교육대상) 선택

□ 권고 내용

- 정부(중앙정부+지방자치단체+지방교육자치단체)의 재정사업 정보를 ‘열린재정’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(~'22년)

* (예) 25세 · 서울 거주 · 대학생이 수혜 가능한 중앙 · 지방 재정사업을 통합 검색

- 세분화된 검색기능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

* 미국은 Benefits.gov 홈페이지에서 ‘혜택 찾기(the Benefit Finder)’를 통해 세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개인에게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- ※ '18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을 복지, 교육 등 16대 분야*로 구분하여 제목 검색이 가능하도록 ‘열린재정’ 홈페이지 개편

* 사회복지, 교육, 농림수산, 보건, 환경, 과학기술 등

[4]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예산) ‘열린재정’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관련 통계 및 보고서 등을 제공 중이나,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 미흡
 - 예산 관련 보고서 중 예산안 첨부서류는 분량이 많은 데 비해 국회 심사 시 활용도가 높지 않음
- (결산)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개요는 통계 정보의 단순 제시가 많고 재정운영 결과의 함의 등에 대한 상세 서술 미흡
 -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·분석 부족
 - * 미국은 결산서(Financial Report of the U.S. Government) 앞부분에 「논의·분석보고서(Management’s Discussion and Analysis)」를 첨부
 - ** 우리나라는 예산상 재정수지와 결산상 재정수지 간 차이만 단순히 제시하는 데 반해 미국은 차이발생 원인(예: 군인·공무원 퇴직급여 총당부채, 허리케인 피해복구 등)을 서술
 -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되고 요약된 정보 제공 부족
 - * 미국은 결산서 앞부분에 다양한 차트와 표를 이용하여 시각화한 요약보고서(「Results in Brief」, 「Executive Summary」) 제시
- (재정운용중간보고서) 재정집행 현황을 회계연도 중 책자*를 통해 공개 중이나, 변화된 재정여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설명 미흡
 - * 「재정동향」(기재부), 「나라재정」(재정정보원)
 - OECD*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및 경제·재정 전망 등에 대한 재정운용중간보고서(Mid-year report)** 작성 장려
 - * 「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」
 - ** 「Mid-year report」 정의(OECD) : 예산집행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정보, 경제·재정전망 수정치,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 등을 포함하는 재정보고서

□ 권고 내용

- (예산)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'열린재정'에서 제공 중인 자료에 전문적인 용어, 통계자료에 대한 해설 등을 추가 ('19년 이후)
 - 국회 심사 시 활용도가 낮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간소화 (국회와의 협의 필요사항)
- (결산) 결산정보의 활용도 제고 및 시각화된 요약 정보 제공 ('18년 결산 이후)
 -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·분석 보고서 작성을 통해 예산 편성, 재정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
 - 결산개요 앞부분에 결산의 주요 내용을 차트, 인포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요약한 보고서 첨부
- (재정운용중간보고서) 재정운용에 대한 리뷰(review) 정보를 담은 보고서(재정운용중간보고서)를 회계연도 중 작성·공개 ('19년 이후)
 - 경제·재정전망 수정치 등 변화된 재정여건과 예산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합의 등을 제시

[5]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현재 서로 다른 법*에 근거하여 재정정보를 공개 중

* 국가재정법, 지방재정법 등

-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통합적 정보 파악에 애로

-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여러 시스템* 간 연계에 관한 근거법 부재

* 중앙정부: '열린재정', 지자체: '지방재정365', 지방교육자치단체: '교육재정알리미'

□ 권고 내용

- ①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, ②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* 제정 필요

* 가칭: 재정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

- 기존 법의 개정보다 별도의 법 제정 필요

- 기존 법은 적용대상*이 각기 다르므로 여러 대상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규정함이 바람직

* 「국가재정법」: 중앙정부, 「지방재정법」: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

○ 법안 내용

- ① 재정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

- 적용대상 :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일반 정부를 적용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

- 재정정보 표준화를 위한 기재부장관의 지침 작성 의무 규정
- 각 기관의 장은 기재부장관이 제시하는 통일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화된 재정정보를 공개
- 공개 대상 재정정보 : 예산정보, 결산정보, 사업 및 성과정보 등
- 각 기관의 장은 동법에 따른 공개 대상 재정정보 외에 기존 법상 공개대상 정보*는 현재처럼 기존 법에 따라 공개

* (예) 「지방재정법」상 ‘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’

② 여러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

- 적용대상 :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
- 기재부장관에게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타 전자적 시스템 간 상호연계 권한 부여
- 기재부장관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관계기관*의 협력 의무 부과

* 행정안전부, 교육부 등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

** 다만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협력 의무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

※ 정부는 위 두가지 핵심내용 이외에 절차적·행정적 사항*을 추가하여 법안 마련

* (예) 재정정보의 공개 절차,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시기 등

참고 하반기 논의 과제

- 중장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·예산 과제에 대하여 하반기에 집중 논의
 -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, 금년 말 정부에 권고안 제출
-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
 - (조세분야) 자본이득과세 · 양도소득세제 개편, 임대소득세제 · 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추가 논의 등
 - (예산분야)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, 성과관리제도 강화,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, 재정여력 확보 등